

2020-3호

AI TREND WATCH

2020. 3. 30.

주요 이슈

- ▶ 영국, AI시대 공직생활윤리기준 검토

최신 동향

- ▶ 미국 AI Initiative 연차보고서 발표
- ▶ AI 활용 복지 부정수급 탐지 관련 해외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이슈

영국, AI시대 공직생활윤리기준 검토

개요

◆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는 영국의 AI와 공공표준(Public Standards)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

- * 공직생활윤리위원회는 영국의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총리에게 윤리적 기준에 대해 조언하고, 모든 공직자의 행동기준과 관련된 이슈를 감시·보고하는 역할을 수행
- ▶ 기존의 공직생활 7대 원칙(Nolan Principles)을 적용하여 주요한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서비스 제공자 대상 총 15개의 권고안을 제시(2020. 2.)

주요 내용

◆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 발간

- ※ 검토 방법: 전문가 회의, 세미나, AI 태도에 관한 여론조사, 문헌조사 등
- ▶ 위원회는 기존의 공직생활 7대 원칙(이하 Nolan Principles)*이 AI 시대에도 충분히 관련성이 있으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AI 기술의 윤리적 위험을 진단
 - * Nolan Principles: 사리사욕 금지,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공개성, 정직성, 통솔력
- ▶ AI 기술은 Nolan Principle 중 공개성, 책임성, 객관성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
 - (공개성에 대한 도전) 정부가 AI 이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책임성에 대한 도전) 조직의 책임 체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공직자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 AI가 내린 결정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등 책임성이 모호해질 수 있음
 - (객관성에 대한 도전) 데이터 편향으로 차별이 확산·증폭될 위험이 있음
- ▶ 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공공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AI에 대한 정부 및 규제기관의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권위 있는 윤리 원칙을 포함시켜야 하며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AI 관리 지침 필요
 - 정부와 규제 기관은 공공 부문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도 마련해야 함
 - 윤리 원칙 명확화, 이해 및 준수가 용이한 윤리 원칙 마련, 규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 윤리혁신센터(CDEI,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보고서 구성

Chapter		주요 내용
1	영국에서의 AI (AI in the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에 대한 개요 • AI가 공공 부문에 중요한 이유 및 정부 정책
2	AI와 놀란 원칙 (AI and the Nolan Princi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인공 지능 시대의 Nolan Principles의 관련성 검토 • 공개성, 책임성 및 객관성에 대한 위험과 기회
3	지침 및 윤리원칙 (Guidance and ethical princi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한 지침과 윤리적 원칙 검토(FAST SUM 원칙^{주1)}, OECD AI 원칙^{주2)},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주3)})
4	AI 규제 (Regulating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의 AI에 대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평가
5	공공기관의 역할 (The role of public bo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이 우수한 거버넌스를 통해 AI가 공공표준에 미칠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주1) FAST SUM 원칙(FAST SUM Principles): 디지털서비스청(GDS), AI사무국(OAI), 앨런튜링 연구소의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AI)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인 「A guide to using AI in the public sector」에서는 FAST 트랙(공정성, 책임, 지속 가능성, 투명성)과 SUM 가치(책임감 있는 AI 설계 및 사용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2019. 6.)

주2) OECD AI 원칙: OECD는「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고 인간중심의 AI 개발·활용 권고안 마련(2019. 5.)

주3)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영국 정부는 고려해야 할 사용자 이익,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에 관한 법적 측면과 원칙을 설명하는「Data Ethics Framework」를 발표(2018. 6.)

◆ 위원회는 정부/국가기관/규제기관, 공공 및 민간 공공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제언

- ▶ (정부, 국가기관 및 규제기관에 대한 제언) 윤리적 원칙과 지침 마련, AI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AI 기술 적용 시 데이터 편향 및 차별 금지 지침 마련, AI 기술에 대한 규제 보증기관 설립, 조달규칙 윤리기준 설정,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공표준 이행 여부 평가도구 제공, AI가 공공표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 AI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개 등 8가지 권장 사항을 포함

정부, 국가 기관 및 규제 기관에 대한 8대 권장 사항

구분	내용
1 윤리적 원칙과 지침 (Ethical principles and guid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세 가지 윤리 원칙(FAST SUM 원칙, OECD AI 원칙,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식으로 함께 기능하는지 불명확하며, 공공기관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확실치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존의 3가지 윤리원칙 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 원칙의 목적, 적용범위 및 위상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지침(A guide to using AI in the public sector)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활용되며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함
2 AI의 명확한 법적 근거 (Articulating a clear legal basis for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 부문 조직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AI 기술 적용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발표해야 함
3 데이터 편향 및 차별 금지법 (Data bias and anti-discrimination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인권위원회는 앨런튜링 연구소 및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이하 CDEI)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개발해야 함
4 규제 보증기관 (Regulatory assurance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영역에서 AI사용에 대한 규제 보증기관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CDEI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보증기관은 AI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별 규제 기관과 정부에 조언 - 위원회는 특정 AI 규제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규제 기관인 CDEI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함 - 정부는 CDEI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함
5 조달 규칙 및 과정 (Procurement rules and proc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공공부문에 적용할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이 공공기준을 충족하도록 조달요건을 마련해야 하며, 입찰 및 계약 시 윤리 기준에 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해야 함
6 국영상업서비스의 디지털 시장 (The Crown Commercial Service's Digital Market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상업서비스는 윤리적 표준 관련 조항이 없음 • 따라서 AI 상품 및 서비스가 공공표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훼손하는지에 대해 공급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다양한 기준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윤리적 요건에 맞는 AI 상품 및 서비스를 찾아야 함
7 영향 평가 (Impact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AI가 공공표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평가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되어야 함
8 투명성 및 공개 (Transparency and disclo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공공기관이 AI 시스템 관련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정해야 함

- ▶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언) 공공표준에 대한 위험성 평가, 다양성 고려, 책임소재 명확화, AI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감독 매커니즘 확립, 이익제기 및 배상방법 안내, 직원 훈련 및 교육 등 7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

공공 서비스 제공자(공공 및 민간)에 대한 7대 권장 사항

구분	내용
9	<p>공공표준에 대한 위험 평가 (Evaluating risks to public standar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이 공공표준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 설계가 공공표준에 미칠 위험을 완화하는지 확인해야 함 AI 시스템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표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10	<p>다양성 (D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 및 민간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인구의 다양한 배경, 행동, 관점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11	<p>책임 확인 (Upholding responsi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당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AI 시스템 운영자는 책임을 다해야 함
12	<p>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
13	<p>감독 확립 (Establishing oversigh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감독 매커니즘을 확립해야 함
14	<p>이의제기 및 시정 (Appeal and redr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에게 그들의 권리와 AI 기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야 함
15	<p>훈련과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원이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시 사 점

- ◆ AI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공공분야에 AI를 적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고안을 제시
 - ▶ 공공 부문에서 AI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 ▶ 이를 위해 규제를 확립하는 정부와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 대상을 나누어 권고안을 마련
- ◆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의 보고서는 AI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통념을 뒤집고 기존의 원칙 틀에서도 AI 기술이 도전하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
 - ▶ AI기술은 기존 원칙 중 공개성, 책임성, 객관성의 원칙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
 - ▶ AI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 예상됨에도 새로운 윤리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원칙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참고 문헌

The Committee on Standarts in Public Life(2020.2.1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Standards – A Review by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The Science Monitor(2019.6.10.), “英정부-엘런튜링研 공공부분 인공지능 지침 발표”.

최신 동향

미국 AI Initiative 연차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

- ◆ 미국 백악관은 2019년에 수립된 AI Initiative에 대한 진행상황과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표(2020. 2. 26.)
 - ▶ (미국 AI Initiative 주요 정책 내용) ① AI R&D 투자 ② AI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혁신 장애요인 제거 ④ AI 인력 양성 ⑤ 국제 지원 환경 조성 ⑥ 정부서비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AI 수용
 - ▶ (핵심 성과) ① AI R&D 예산 증액 ② 연방데이터 전략 수립 ③ 거버넌스 표준화를 위한 규제원칙 및 기술 표준 개발 전략 수립 ④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교육훈련 우선순위화 ⑤ 미국 주도의 OECD AI 기본원칙 마련 및 파트너십 구축 ⑥ 인공지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센터 설립

미국 AI Initiative 주요 내용과 1차 연도 핵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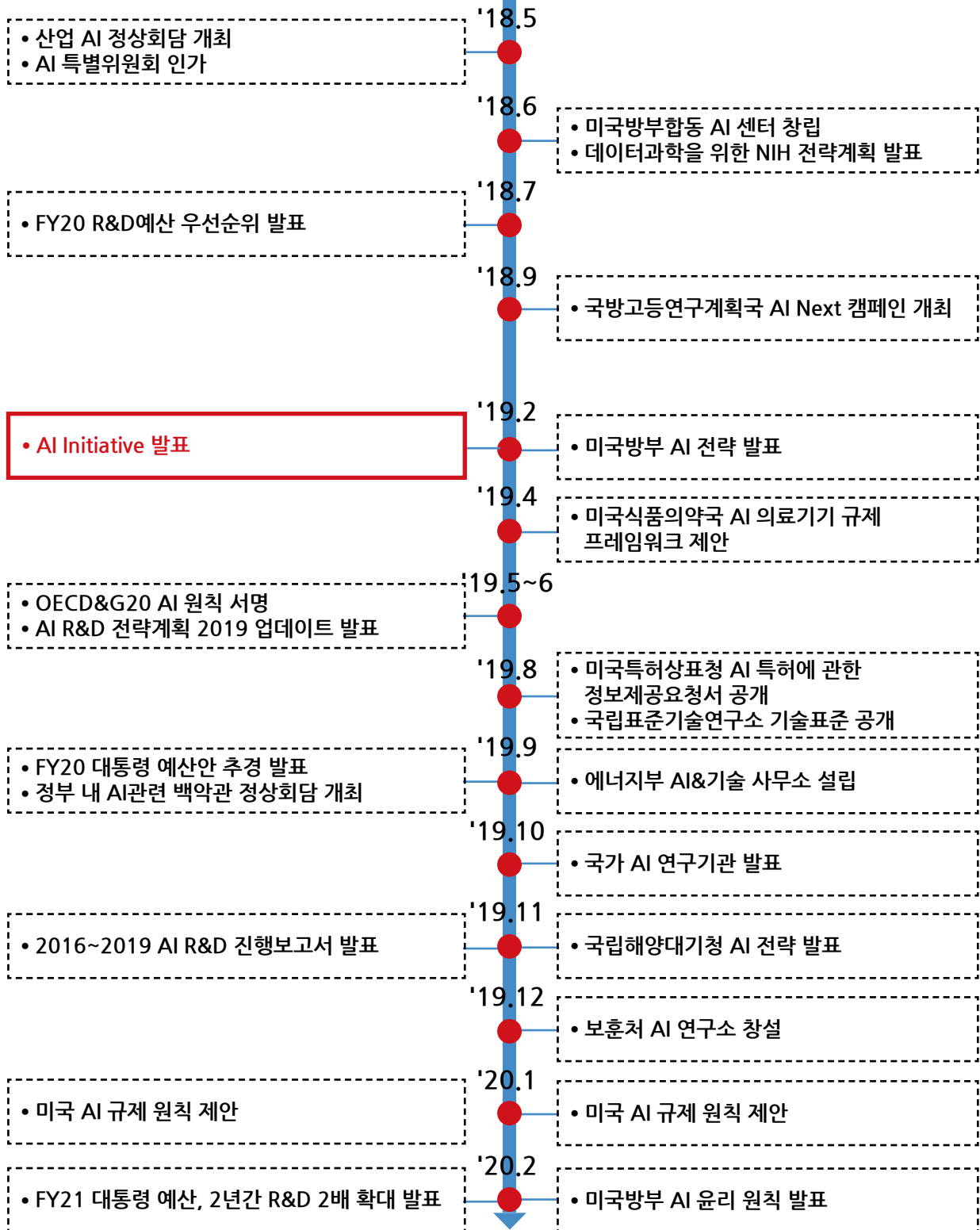
구분		Initiative 주요 내용과 핵심 성과	
①	AI R&D 투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분야의 기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 학계, 국제 파트너 및 동맹국, 기타 비 연방 단체와 협력하여 AI R&D에 대한 연방 투자를 장려해야 함(연구개발 투자)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목적 외의 AI R&D 예산 증액 요청(2021년 예산 제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인 R&D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AI 분야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2022년까지 2배로 증액할 것을 요청 • 정부는 AI R&D 전략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2016~2019년간 R&D 투자 효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발표(2019) • 정부 차원의 군사목적 외 AI R&D 지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2019)
②	AI 자원 활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연방데이터, 모델, 컴퓨팅 자원에 대해 안전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밀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연방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 접근과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도록 연방기관에 요청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예산집행부는 연방데이터 전략을 수립(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략은 연방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활용 (운영 원칙과 우수 사례)

③	AI 혁신 장애요인 제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AI 기술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AI 기술의 안전한 개발, 테스트, 배포 및 적용에의 저해요인을 줄여야 함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악관은 최초의 AI 규제 원칙(American AI Regulatory Principles)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분야에서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 규제는 공정성, 차별 금지, 공개성, 투명성, 안정성을 반영해야 함 AI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에 앞서 위험 평가와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유연한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AI 기술 표준 개발 전략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표준(개념 및 용어, Data와 knowledge, 휴먼인터랙션, 매트릭스, 네트워킹, 성능 테스트 및 보고 방법론, 안전, 리스크 관리, 신뢰성 등)과 기타 표준(사회적/윤리적 고려사항,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을 적시 이 중 연방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연계된 표준화는 개인정보보호, 차별 없는 AI, 투명하고 개방적인 AI, 개발자의 설계 의도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 포함
④	AI 인력 양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노동자들에게 견습과 기술 프로그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교육을 제공하여 AI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방 기관에 AI 관련 실습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지시 국립과학재단의 신생 국립AI연구소(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는 AI 분야 연구원 양성에 기여
⑤	미국 AI 혁신을 지지하는 국제환경 조성 촉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기술 우위를 보호하면서 미국 AI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을 개척해야 함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 합의를 전개하기 위해 OECD에서 적극 노력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AI 원칙이 채택되도록 국제 파트너(G7, G20)와 협력
⑥	정부 서비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AI 수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서비스 효율성 개선을 위해 AI 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유를 포함한 국가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핵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총무청은 AI 전문가 조직인 AI COE(Center of Excellence)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관련 파트너십, 투자 및 확장을 촉진 조직간 인공지능 적용 모범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데에 도움

AI Initiative 이행 사항

백악관

연방기관



자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2020. 2. 26.)

참고 문헌

김규리(2019. 6. 26.),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Special Report 2019-6, NIA.

김동철(2019. 12. 17.), “글로벌 AI주도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AI 정책동향“, SPOT 2019-25, IITP.

미국 예산관리처(2020. 2. 10.), “The Budget for America’s Futur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2020. 2. 26.), “American AI Initiative: Year One Annual Report”.

주요 내용

◆ 최근 네덜란드에서 AI를 활용한 복지 부정수급을 식별하는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발표, AI를 활용한 복지 부정수급을 검토하는 여러 국가에 시사점 제공

- ▶ (네덜란드) 네덜란드 법원은 AI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복지 부정수급을 식별하는 정부 시스템이 인권과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시스템 작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
 - 네덜란드 정부의 위험 표시 시스템(SyRI)은 사회 문제 및 고용 관련 부처에서 사용하는 위험 계산 모델로 정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떤 개인이 부정 수급 혜택을 받거나 탈세할 위험이 높은지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
 -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저소득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사회 취약계층을 목표로 삼고 있고(주로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이 많은 지역에 적용)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복지수당 수급자를 영구적인 용의자로 취급)했으며, 판별 시스템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정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 거부)
- ▶ (미국)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을 문제시 했으며 각 주에서는 복지 지원제도(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부정수급을 탐지하는 데에 AI와 자동 시스템을 적용하는 추세
 -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부정 수급률은 실상 높지 않으며, 부정수급이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행정적인 실수에 기인), 알고리즘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
- ▶ (한국)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및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
 - 정부는 '19년 국가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으로 108건, 21억 원 부정수급 적발
 - * SFDS는 6개월~1년 단위로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매월 탐지해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 이는 전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19년: 11만 9511건, 601억 원)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자동 적발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에 2020년도 기존 시스템에 빅데이터 기반 AI를 접목*해 적발률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에 따라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안, 2020. 2. 17.)

* 10년 간 적발해 낸 부정수급 패턴을 적용시킨 AI가 접목된 SFDS에 수급자 정보를 매칭시켜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람들의 사례를 밝히는 한편 정상적 소명이 완료된 경우 자동으로 이상 사례에서 제외하는 등 정확성 향상 기대 가능

- ▶ AI 기술이 보다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참고 문헌

매일경제(2020. 2. 17.), “혈세 부정수급 AI가 잡아낸다…기재부 연내 시스템 구축”.

전자신문(2020. 2. 9.), “기재부, 보조금 도둑 잡는 '알파고' 개발 이달 중 착수”.


파이낸스뉴스(2019. 10. 31.), “정부, 국가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으로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TechCrunch(2020. 2. 6.), “Blackbox welfare fraud detection system breaches human rights, Dutch court rules”.

The Guardian(2020. 2. 5), “Welfare surveillanc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Dutch court rules”.

UPI.com(2020. 2. 5.), “Dutch anti-fraud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court rules”.

US News(2020. 2. 14.), “States Increasingly Turn to Machine Learning and Algorithms to Detect Fraud”.



KISDI AI TREND WATCH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AI전략센터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15일과 30일에 온라인으로 배포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는 AI전략센터 김민진 전문연구원(minjinkim@kisdi.re.kr, 043-531-4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